

POLITICS

2025년 4월 16일 수요일

민주당 대선 경선...김경수·김동연·이재명 등록

시, 소득안정·친환경농업 확산 친환경비 재배농가 19억 지원

광주시는 비 재배농가의 경영안정과 친환경농업 확산을 위해 비 재배농가에 경영안정대책비 19억원을 지원한다.

먼저 친환경인증 비 재배농가에 ha당 120만원의 지원, 친환경면적 확대를 유도한다. 이는 전년 대비 35% 이상인 것으로, 친환경비 재배농가 소득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일반비 재배농가는 정착면적에 따라 차등 지원받으며, 사업 신청 면적에 따라 올해 7월 단가가 최종 확정된다.

경영안정대책비 지원 대상은 2024년산 비배 재배한 광주시 농업경영체 등록 농가 중 일정면적(1000㎡ 이상)을 경작하고, 농업의 종합소득이 3700만원 미만인 경우다. 광주에서는 총 5600여 농가가 지원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신청은 오는 5월 1일부터 31일까지 농지 소재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하면 된다. 양동민 기자

해상풍력기업 본격 투자유치 도, 유럽 최대 전시회 참가

전남도가 대한민국 해상풍력 산업의 중심지로 도약하기 위해 글로벌 기업유치 활동을 본격화한다.

15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10일까지 3일간 유럽 최대 규모 해상풍력 산업 전시회(Wind Europe 2025)에 참가해 글로벌 해상풍력 기업과 면담하고, 목표 사항을 포함한 전남 해상풍력 인프라와 투자인센티브 등을 적극 홍보했다.

덴마크 코펜하겐에서 열린 전시회는 해상풍력 산업의 최신 기술과 시장 동향을 알 수 있는 유럽 최대 규모 전시회다. 550여 글로벌 해상풍력 기업과 정책 결정자, 연구기관 등 1만5000여 명이 참석했다.

전남도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이하 코트라)와 협력, 한국 풍력 투자환경 컨퍼런스를 개최해 전남지역 풍력산업의 강점을 역설함으로써 참여한 해상풍력 기업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었다.

또한 부품 제조업체 및 프로젝트 개발사들과의 1대1 비즈니스 미팅을 통해 최적의 투자 환경을 갖춘 목표 사항을 소개하고, 실제 투자로 이어지도록 유도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선택! 6·3 대선

더불어민주당이 15일 6월 3일 치러지는 제21대 대통령 선거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후보 등록 결과, 이재명 전 당 대표와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가 등록을 마쳤다.

민주당은 16일부터 총청권을 시작으로 권역별 권리당원 투표가 진행된다.

김 전 지사는 이날 가장 먼저 예비후보 등록을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 대선 경선은 계엄과 내란을 완전히 극복할 수 있도록 압도적인 정권 교체를 위한 경선이 되어야 한다"며 "헌정을 지켜낸 헌정 수호세력들이 모두 함께 힘을 모으는, 빛의 혁명에 의한 빛의 연대, 빛의 연정을 통해서만 들어설 민주 정부가 성공할 수 있는 정부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16~27일 4차례 순회 경선...27일 최종 후보 선출 호남권 경선대회, 26일 광주 김대중센터서 진행

김 지사는 "'어대명'(아차피 대통령은 이재명)이 아니고 '어대국'이다. 아차피 대통령은 국민이 뽑는다"라며 "정권 교체는, 우리 사회 내 교체를 이루는 유쾌한 반란을 반드시 만들겠다"고 각오를 다졌다.

그는 "많은 당원 동지 여러분이 경선 행에 빨간불을 켜준다. 반드시 파란불을 켜겠다. 돌풍을 불러일으키겠다"며 "계엄은 폐파도, 조직도 없지 않나. 경계를 경계하는 국민이 제 계파이자 조직이다. 국민만 보고 가겠다"고도 했다.

이 전 대표는 캠프 비서실장인 이해식 의원이 후보 등록을 마쳤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전날(14일) "민주당을 힘 있게 견



김경수 김동연 이재명

부터 27일까지다.

민주당은 전국 4개 권역 순회경선을 마친 후 후보별 권리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여론조사) 50%를 합산해 최종 후보를 결정한다.

국민 선거인단 투표는 21일부터 27일 사이 이틀간 진행될 예정이다.

오는 27일 한 후보의 득표가 과반을 넘길 경우, 결선 투표는 진행되지 않는다. 이 경우 그가 최종 후보가 된다.

다만 과반을 넘기지 못할 경우 사흘간 결선 투표를 진행한 뒤 내달 1일 최종 후보를 확정한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내란종식 민주헌정수호 새로운 대한민국 원탁회의

일시 | 2025년 4월 15일(화) 오후 1시 30분 장소 | 국회의원사당 본청 316호 회의실

이5당 원탁회의서 발언하는 박찬대 당 원내대표

美 민감국가 리스트 韓 포함...과학·산업협력 우려

미국 에너지부가 15일(현지시간)부터 이른바 민감국가 리스트(SCL)에 한국을 포함해 관리한다.

미국 측은 보안 우려를 이유로 한 이번 조치에 따라 동맹국인 한미 양국간 원자력 협력에 대한 우려를 표하며, 양국간 원자력 협력에 대한 심도있는 협력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미국 에너지부는 바이든 정부 때인 지난 1월 초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SCL) 상의 '기타 지정 국가'로 추가했으며 이날 시행을 예고했다.

현재까지 이 조치의 시행이 유예되거나 변경되지 않은 상태라고 북수의 외교 소식통이 이날 전했다.

민감국가 리스트는 에너지부 내부 규정이며 공식적으로는 대외에 공개하지 않는다. 연합뉴스

국힘 1차 경선 컷오프 누가 통과할까

'4강' 김·한·홍·나 또는 안 유력...반탑파 득세 구도

대선을 49일 앞둔 15일 국민의힘 예비 후보들이 당에 공천 신청을 마쳐 오는 22일 1차 컷오프를 통과할 네 명의 후보가 누가 될지 관심이 쏠린다.

국민의힘이 이날 대선 후보 경선 신청을 마감한 결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 홍준표 전 대구시장, 한동훈 전 국민당 대표,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양향자 전 개혁신당 원내대표, 이철우 경북지사, 유정복 인천시장이 등록을 마쳤다.

국민의힘은 이들에 대해 서류 심사를 거친 뒤 오는 22일까지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로 상위 4명을 가리는 1차 예비 경선을 실시한다.

국민의힘은 1차 경선은 '100% 국민 여론조사'를 적용하되, '역선택 방지 조항'을 유지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당헌 제99조(여론조사 특례)는 '각종 당내 경선 여론조사는 국민의힘 지지자와 지지정당이 없는 자만을 대상으로 실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차 컷오프를 통과할 후보로는 김문수·한동훈·홍준표 후보에 나경원 또는 안철수 후보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후보 등록을 코 앞에 두고 오세훈 서울시장과 유승민 전 의원의 경선 불출마 선언에 이들이 당내 경선 판세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거리다.

당내에서 수구러들지 않는 '한덕수 대망론'이 변수가 될 전망이다. 한 대행이 무소속으로 출마해 국민의힘 후보와 단일화하는 '제3 지대 빅테트론'도 제기됐다.

'반(反)이재명'을 공동분모로 보수·중도 주자들이 후보 연대 또는 단일화를 하자는 구상이다.

2차 경선은 후보자 간 1대1 지명 토론회와 합동 토론회를 열고 27~28일 여론조사(국민 50%-선거인단 50%)를 거쳐 29일 결과를 공개한다.

이후 다음 달 1~2일 여론조사(국민 50%-선거인단 50%) 결과를 반영해 3일 전당대회에서 최종 본경선 후보를 발표할 방침이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지방정가

“30개월령 이상 美 소고기 수입...건강 위협”

김성일 의원, 정부에 단호한 대응 촉구

전남도의회 김성일 의원(더불어민주당, 해남·사천)은 최근 미국전국 소고기협회(NCBA)가 미국무역대표부(USTR)를 통해 '한국의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 철폐를 공식 요구하며, 이를 비판세장벽으로 지목한 데 강한 우려를 표하고 국민 건강권을 위협하는 외교적 압박에 강력히 대응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김 의원은 15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비정형소해면상뇌증(BSE, 광우병)은 주로 30개월령 이상 소에서 발생한다는 과학적 근거에 따라 수입을 제한해 왔다"며 "이러한 방역 조치가 미국의 통상 압력에 의해 무너진다는 건 국민의 생명과 우리 축산업의 존립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3년간 미국 내 광우병 검사 건수가 대폭 감소해 감염 여부조차 확인되지 않는 소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의심되는 상황"이라며 "월령 제한하



지 철폐된다면 광우병 감염 소의 국내 유통 위험은 커질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김성일 의원은 "우리나라는 이미 아시아 최대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국이자 한미FTA에 따라 내년부터는 전면 무관세가 적용되는 국가이다"며 "일본과 같은 기준을 내세우며 월령 제한 철폐를 요구하는 것은 자국 이익만을 앞세우는 매우 부당한 처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과 안전은 그 어떤 경제적 이해관계보다도 우선되어야 할 절대적 가치"라고 강조하며 "정부와 국회는 국민의 건강과 위기에 봉착한 대한민국 한우 농가의 생존권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을 반드시 유지하고 미국의 외교적 압박에 결코 굴복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재대 도의원 “담배 유해성분 전면 공개를”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 대표 발의

이재대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 나주·사천)은 15일 제389회 전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담배 제조물의 결함 인종 및 사회적 책임 촉구 결의안'을 대표 발의하며,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보다 근본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번 결의안에서 담배 유해성분의 정보 비공개 실태와 이에 따른 국민 건강 피해 문제를 강하게 제기하며 제조사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했다.

이재대 의원은 "담배에는 약 4000종의 화학물질과 70여 종의 발암물질이 포함되어 있음에도 현재 제품 포장에는 타르와 니코틴 외에는 어떠한 유해 성분 정보도 제공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소비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제조물 표시상의 중대한 결함"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흡연으로 인한 폐암, 후두암 등 각종 질병은 물론 지난 5년간 약 17조 원에 달하는 건강보험 진료비 부담을 초래했다"며 "담배 제조사는 더 이



상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결의안은 △담배 제조사는 제품에 포함된 모든 유해 성분과 흡연의 위험성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제조물 표시상의 결함을 인종 △흡연으로 인한 건강보험 재정 손실과 국민의 직·간접적 건강 피해에 대해 담배 제조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손해배상에 임해야 함 △정부 및 관계 기관은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 따라 금연 환경 조성을 위한 관련 정책을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재대 의원은 "오는 2025년 11월 시행 예정인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담배 제조사의 법적 책임을 강화하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전남도의회도 건강한 사회를 위한 금연 문화 확산에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전남 청년 주거·출산 지원 정책 전환 촉구

조옥현 도의원 “작년 5944명 순유출...정책도입 절실”

전남도의회 조옥현 의원(더불어민주당, 목포2·사천)은 15일 열린 제389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남 청년 인구 유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청년 주거·출산 지원 정책의 대대적인 전환을 촉구했다.

조옥현 의원은 "청년들에게 결혼과 출산은 더 이상 축복이 아닌 두려움과 좌절의 상징이 되고 있다"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높은 산은 부동산이고, 가장 낮은 산은 출산이라는 표현이 이 같은 현실을 대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어 "통계청의 '국내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에서는 20~39세 청년 인구 5944명이 순유출됐다"라며 "전남은 전국에서 청년 유출이 가장 심한 지역 중 하나"라고 강조했다.

조옥현 의원은 현행 '청년 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이 월 20만 원, 1년의 단기 지원에 그친 기간도 2주에 불과해, 청년의 지역 정착을 유도하기에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원 기간의 연장, 집임 장벽 완화, 프리랜서



·창업자 등 다양한 직업군으로의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주거 정책을 일자리와 연계해 청년 채용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하거나, 지역 기업과 협력한 정착형 통합지원모델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덧붙였다.

출산 정책에 대해서도 "출산장려금 중심의 일시적 지원에서 더 나아가, 출산 전후 의료비 지원, 육아기 소득공백 보완, 맞벌이 부부 돌봄지원 등 실질적인 정책 개입이 병행되어야 한다"며, "청년 세대가 안심하고 삶을 설계할 수 있는 다층적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전남도가 청년들에게 살기 위해 떠나는 곳이 아닌, 살고 싶어 찾아오는 곳이 될 수 있도록 도의회의 집행부가 함께 구조적인 정책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